

전주시, 국제인증 4관왕... 신뢰와 자부심 더하다

국제슬로시티 · 아동친화 · 음식창의 · 안전도시

세계의 도시들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도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전주시는 세계적으로 안전한 도시 뿐 아니라 향토음식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곳, 도시 전역이 전통과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곳이자 어린이가 살기 좋은 국제도시로 인정받는다.

국제슬로시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등에 이어 안전도 갖춘 국제인증 4관왕 도시 전주시는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자부심 강화는 물론 도시의 신뢰성까지 갖추며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서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관광객이 믿고 찾는 전주

전주시는 전북지역 최초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의미하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다.

민선6기 시작부터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주 만들기'를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안전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도시 시민 네트워크인 안전도시협의회·실무분과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는 등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준비해왔다.

시는 경찰서와 소방서, 교육청 등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함께 자살예방, 교통안전 등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살예방 △낙상예방 △교통안전 △방범폭력예방 △학 교어린이안전 등 6개 분야별 안전사업을 지속 추진, 손상사망률과 5대 범죄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자살사망률과 5대 범죄 발생률, 교통사고가 각각 감소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며 시민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각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안전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가 되었으며, 국제적으로 믿고 찾는 전주시로 관광객이 늘어날 전망이다.

▲향토음식이 만들어낸 국제도시 전주

자살예방 등 5대 범죄 발생률 줄여

도내 최초 국제안전도시 인증

절이고 발효시킨 '슬로푸드' 등

음식문화 창의산업으로 발전

느림슬로운동 가치 확산 노력

슬로시티 어워드 수상하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이에 앞서 한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 전주는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의 7개 분야 문학·음악·민속공예·디자인·영화·미디어·음식 가운데 전주시는 음식전통문화를 창의 산업으로 발전시키며 세계적인 음식도시로 뻗어 나가고 있다.

영국의 유력 언론매체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한국에서 음식으로는 상대할 곳이 없는 도시'로 소개되기도 한 전주 향토 음식은 건조하고, 절이고, 발효시킨 '슬로푸드' 요리법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음식창의도시 선정으로 도시 홍보에 유네스코 로고를 공식 사용하고 전주시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유네스코 웹사이트에 게재·홍보할 뿐만 아니라 전주



전주시는 27일 덕진예술회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데일 헨슨(Dale Hanson)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OCC) 의장, 조준필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장, 배정아 국제안전도시 심사평가 전문위원, 유관기관 및 단체 주요인사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가졌다.

비밀박추제부터 향토 음식과 전통문화를 지구촌 곳곳에 전주를 알리며 천만관광도시의 도화선이 되었다.

▲느림의 미학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든다

전주시는 인구 60만 도시 중 세계 최초로 도시 전역이 국제슬로시티로 확대·재지정

되면서 도시 전역이 전통과 자연을 보전하고, 느림의 미학이 살아있는 도시다.

전주시는 세계최초 도심형 슬로시티라는 타이틀에 만족하지 않고 느림슬로운동의 가치 확산을 위해 인력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세계가 묻고 전주가 답하다'를 주제로 '제1회 전주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

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슬로시티의 위상을 자랑했으며, 2018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총회'에서 지역주민 마인드와 교육 '기관표창' 부문의 슬로시티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전주시는 연간 1000만명이 방문하는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국제슬로시티로서의 국제적인 위상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문화특별시를 넘어 세계적인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돋움 했다.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

이밖에 전주시는 어린이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있는 가운데 세계가 인정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다.

시는 민선6기 공약인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아동의 권리보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규정을 담은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따뜻한 아침도시락을 배달하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과 도시지원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지혜의 반찬',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아이들은 위한 자연 속 놀이터 '전주 아이 숲', 365·24 아동진료실 운영 등 아동친화도시의 명성에 걸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며 도시의 미래주역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전주가 되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제인증이 늘어나는 것은 가장 지역적이지만 가장 보편적인 세계 도시로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러 분야의 국제인증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자부심과 자선감 또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강동화 전주시의회 부의장 대한민국 총효대상 수상

전주시의회 강동화 부의장이 24일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한국을 빛낸 대한민국의 총효대상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총효대상 총효 의회부문 2018전주시발전공로대상을 받았다.



27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강 부의장이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열린 의회, 시민이 즐겨 찾는 의회를 만들고 시민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이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 부의장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전주시민의 뜻으로 생각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송효철 기자

해외연수 금품수수 의혹

전북도의원 경찰 조사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의회 소속 한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북도의회 A의원은 해외연수 과정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A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유럽 해외연수 과정에서 다른 참가자 뒤편으로 배정된 경비 수백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는 연수를 주관한 여행업체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전주 시민의 장' 명칭·수상부문 개선 아이디어 공모

시, 내달 19일까지 신청접수

전주시가 전주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엔 헌신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전주 시민의 장'의 명칭과 수상부문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시는 오는 9월 19일까지 시청 홈페이지(www.jonju.go.kr)를 통해 전주시민의 장 명칭 및 수상부문 개선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전주 시민의 장 50여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50년

을 대표할 '전주 시민의 장'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분야는 △명칭 제안 분야 △수상부문(현 7개 부문) 개선 분야 등 2개 분야로 '전주 시민의 장'의 미래 비전에 맞는 신규 명칭과 수상부문에 대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시 홈페이지 '공모코너'에 제안하고 싶은 의견을 별도의 신청서 업로드 없이 온라인 입력만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1차 실무부서 예비심사와 2단계 시민선호도 조사, 3차 본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선호도 조사는 인터넷 소외계층의 의견변명을 위해 홈페이지 설문조사 뿐 아니라 시·구청·사업소·주민센터 민원창구에 설문지를 비치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 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 당선작에 대해서는 명칭부문 선정작 20만원, 수상부문 개선분야 선정작 30만원, 각 부문별 예비심사 통과작 각 5만원 등 총 150만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공모 선정작은 오는 10월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송효철 기자

서민 주거불안 해소 '톡톡'

빈집활용 청년쉐어하우스 등 전주형 사회주택 시, 사회주택 활성화 토론회서 운영사례 발표

전주시가 구도심 빈집을 활용해 조성한 청년쉐어하우스와 전주달팽이집과 팔복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을 리모델링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 팔복추천마을 사회주택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27일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회주택 활성화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주시가 그간 추진해온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운영사례가 발표됐다.

이 사업은 시가 민간소유의 토지(건물)를 매입하거나 공공 부지를 활용해 사업시행자에게 장기 20년까지 임대하면 사업시행자는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하여 주거취약 계층에게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운영하는 사업이다.

먼저, 사례발표에 나선 강충상 완산동 청년쉐어하우스 대표는 공유주택의 개념과 청년쉐어하우스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한 뒤 "1인 가구 문제에서 접근한 청년쉐어하우스 등 전주형 사회주택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입주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공동체를 형성하고, 노년 인구 중심의 구도심에 젊은층 유입으로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창하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조합원은 "지역의 청년들도 다양한 주거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역민의 특성을 알고 각각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공공의 자산인 사회주택은 이제 시작단계인 만큼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표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국장도 '팔복동 새마을을 사회주택 운영 사례'를 통해 팔복동 추천마을 운영 배경과 목적, 운영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전주형 사회주택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하기도 했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전주형 사회주택의 공급 및 운영의 내용을 정리하고,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전주형 사회주택 방향을 조정하고 맞춤형 전주 사회주택 공급모델을 발굴하는 등 사회주택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민달팽이협동조합(이사장 임소라)과 함께 동완산동 시 소유주택을 활용해 월 10만원 정도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 쉐어하우스 사회주택 6가구를 공급했으며 지난 4월에는 팔복동 소재 다세대주택 2개 동 10가구를 공급하는 등 총 16가구의 사회주택을 공급했다. /송효철 기자

특검 60일 수사 성과... '제기 의혹 상당수 근거 없다'

'수입 30억·지출 29억' 외부자금 유입 없어 김경수 불법후원금 수수 의혹도 '사실무근'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에게 외부 자금이 유입됐다는 의혹 등 제기된 다수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대부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2016년 9월 12일부터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모두 195회에 걸쳐 김 지사 후원회 계좌로 2564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모두 개인이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을 뿐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증거자료는 없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본 뒤 드루킹에게 현금 100만원을 줬다는 의혹의 경우 관련자가 최초 진술 이후 진술을 번복한 점, 다른 관련자들이 모두 부인하는 등 이유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문재인 당시

등 물품 판매 등을 합한 수입은 30억원을 넘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불법 후원금 25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경공모 불법활동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잘못이었다고 보지 않았다. 앞서 2017년 4월 대선 후보 당내 경선 현장에서 김 여사가 "경인선에 가지"며 자리를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은 근거로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검 관계자는 "후보의 배우자가 지지그룹인 경인선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사실만 확인된다"라며 "이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특검팀은 드루킹이 윤모 변호사를 청와대 행정관 인사청탁 의혹 역시 내부 논의 흔적만 있을 뿐 외부로 표출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공모 회원이 안철수 대선 후보 선거캠프 홍보전략을 빼둘러 김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 역시 김 지사가 개입했다고 단정할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경공모 불법활동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잘못이었다고 보지 않았다. 앞서 2017년 4월 대선 후보 당내 경선 현장에서 김 여사가 "경인선에 가지"며 자리를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은 근거로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검 관계자는 "후보의 배우자가 지지그룹인 경인선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사실만 확인된다"라며 "이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특검팀은 드루킹이 윤모 변호사를 청와대 행정관 인사청탁 의혹 역시 내부 논의 흔적만 있을 뿐 외부로 표출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공모 회원이 안철수 대선 후보 선거캠프 홍보전략을 빼둘러 김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 역시 김 지사가 개입했다고 단정할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시스